

바람직한 '탁아관련 입법'을 위한 제언

90.6.17

지난 이삼십년 동안 일어난 급격한 사회변화로 이미 육아 문제는 가정이나 어머니 책임이라는 식의 논의는 그 초점을 잃게 됐다.

그러나 평민당에 이어 민자당이 '영·유아보육법'을 최근 내놓으면서 본격화되고 있는 탁아법 제정 추진 논의는 "엄마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엄마들을 위해 나라가 선심써서 탁아소를 세워주겠다"는 고정관념도 청산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아이를 기르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흔히 어머니 아기의 애착관계를 통한 심리적 안정감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된 어머니가 혼자 아동 발달에 전적으로 책임졌던 사회는 없었다. 오늘날의 기성세대들이 기억하는 아동기의 체험도 예외는 아니다. 언니, 오빠와 또 대집단 속

목적의 탁아소가 대부분인 미국에서는 탁아소가 철저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계층에 따라 커다란 질적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탁아소가 나아가 어린 아기들에게까지도 교육을 통한 계층재생산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극심한 상업화 경향에 따라 기업화된 탁아소가 전국적 연쇄점을 형성하여 규격화된 탁아 환경, 탁아 방식을 만들어낸다는 문제와 보육료에만 의존한 탁아소 제정은 종사자들을 낮은 임금에 시달리게 하고, 운영자는 육아문제에 얽힌 사고보험료의 상승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구조적 모순 속에서 그 발달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육아제도의 공공운영 방식을 택하고 있는 유럽과 일본의 예를 보면 철저한 지방분권주의와 지방자치제의 전통이 국가권력의 획일적 육아환경 구성과 통제의 위

연령층의 어린이들에게 야심적 조기교육자가 열심히 '교육'하려고 하면, 특히 제도적 틀 안에서는 '조용한 지옥'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또한 우리의 교육문화 풍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춘지'(돈봉투)의 폐해가 제도적 육아현장까지 확산된다면 말 못하는 아기들까지도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부모들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악몽이 될 것이다.

실례로 이미 일본의 많은 보육원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제복과 줄서기가 강요된 예절 속에서 어린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획일적 제도와 질서위치를 갖게 될 우려가 있다. 상업화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 24시간제의 영리 추구를 위한 '베이비호텔'의 문제에서부터 탁아소의 보육교재가 상업적 상품으로 일관되어 아이들의 보육환경까지 편의적 상품시장 논리가

정부통제 떠난 지방자치 규모로

에서 생활했고 어머니와 친척, 이웃이 보살펴주는 가운데 세상을 익히며 자랐다. 지금의 자연·지역적 연계로부터 고립된 개인인 어머니나 할머니 또는 파출부와의 1대1의 일상 생활은 우리의 전통적 관념에 비춰봐도 아동의 건전한 사회성 발달을 위한 환경이라고는 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육아를 사회화하고, 탁아소 설립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육아의 제도화란, 국가 권력의 통제가 가능한 연령층을 갓난아기로까지 끌어내리고, 지배적 가치관이 획일적으로 저항없이 주입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육아 제도가 현실화되어 있는 다른 나라의 현상을 미리 살펴서 획일화와 국가의 통제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제까지 자연적 기능에 맡겨졌던 유아교육이 정부통제나 상업논리로 가게 되면 계층 재생산과 현재 학교제도의 문제점이 그대로 다시 확산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 조정기능에 맡긴 자연적 견제란 측면에서 미국의 예를 들 수 있다. 영리

정 병 호

·정병호(35)씨는 지난 80년 서울 난곡에서 친구들과 함께 탁아소를 운영했고 84년에는 종로구 창신동에서 우리나라 빈민지역 탁아운동에 참여했다.

현재 미국 일리노이대 동양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인류학을 전공, 2년반 동안 일본 오사카, 후카이도에 서 '일본의 탁아제도'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며 세계 여러 나라의 탁아 실태를 조사했다.

〈편집자〉

협성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폭넓은 혁신세력의 존재가 다양한 사회집단의 참여를 유도, 주민 참여를 통한 견제가 조직화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탁아소 생활은 제도적 육아방식으로서 그 자체가 극복해야 할 많은 벽이 있다. 곧 관료화와 상업화의 물결로부터 이 새로운 제도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낮은

지배하게 된다.

탁아제도의 확립 문제는 입법 준비과정에서부터 이미 현실로 출발되었다.

그러나 전국적인 탁아제도의 확립이라는 막중한 일을 위한 연구 및 준비과정이 한강에 다리 하나 세우는 정도의 계획 감각도 없이 그동안의 타성적 입법과정의 관행에 따라 그대로 추진된다면 그 조건 속에 살아야 할 부모와 아이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생각하기조차 끔찍하다.

전국적인 탁아정책 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정부가 직접통제하는 구조보다는 동단위 정도의 지방자치에 맡겨 지방별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형태를 강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밖에 수익자 부담 원칙은 원칙적으로 배격해야 한다. 저소득층에 한해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한다는 개념보다는 처음부터 소득에 따른 차등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육아 문제가 정부의 획일적 통제와 상업화되는 또하나의 모순된 현실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회과학 등 학계 전문가와 재야 변혁세력이 탁아관련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개입,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